주간통일정세 2013-17(2013.04.22~04.28)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3-17

Contents

>> Ⅰ.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Ⅰ.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김정일 금고지기' 전일춘, 8개월만에 北매체 등장(4/23, 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의 비자금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일춘 노동당 39호실장이 오랜만에 북한 매체에 등장해 눈길을 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전함.
- 뉴스가 조선중앙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지난 21일 오후 8시 뉴스 시간에 소개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증조모인 강반석의 121회 생일 헌화행사에서 전일춘의 모습이 확인됨.
- 전일춘은 이 행사에서 강반석의 묘에 바치는 화환을 들고 입장했으며 최태복 노동당 비서, 강석주 내각 부총리,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등 당과 내각의 주요 간부 바로 뒷줄에 서서 참배함.

北 박봉주 첫 현지시찰…황남도 농사실태 점검(4/23, 조선중앙통신)

- 북한 박봉주 내각 총리가 황해남도 해주시에 있는 비료공장과 채소온실, 청단군 청정협동농장, 강령군 부민협동농장의 농사실태를 현지에서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전함.
- 박 총리가 지난 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내각 수장에 오르고 경제현장 등을 둘러보는 이른바 '현지요해(파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박 총리는 현지에서 농업근로자들을 격려하고 농장이 선진 영농방법을 받아들이고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는 데 대해 언급했다고 중앙통신이 밝힘.

北, 인민군 창건 81주년 '차분히' 경축(4/24, 노동신문)

- 북한은 인민군 창건 81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차분하게 기념일을 경축하는 모양새라고 연합뉴스가 24일 전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백전백승의 최정예강군'이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인민군은 사상의 강군, 정신력의 강군"이라며 "싸우지 않고도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최정예 강군"이라고 군대를 치켜세움.
- 정론은 최근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된 것과 관련해 "소형화·경량화·다종화된 핵무기까지 가진 강군의 기상 앞에 적이 혼비백산하고 있다"며 "반미 전면대결전은 끝나지 않았어도 우리는 이미 전승의 광장을 보고 있다"고 주장함.

北, 석탄공업상에 리영용 승진 임명 확인(4/25, 연합뉴스; 조선중앙방송)

- 북한 내각의 석탄공업상에 리영용(58) 부상(차관급)이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5일 전함.
- 연합뉴스가 25일 확인한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의 지난 21일 자는 전날 열린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경제발전계획의 올해 1·4분기 총화(평가)와 2·4분기 대책과 관련해 "토론에는 전길수 철도상, 리영용 석탄공업상, 최철룡 황해남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참가했다"고 밝힘.
-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가 이달 6일까지 리영용을 석탄공업성 부상으로 소개한 점을 미뤄볼 때 그가 최근 석탄공업상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임.

北, 軍창건일에 약식 열병행사·3代 김씨 띄우기(종합2보)(4/25, 조선중앙TV)

- 북한은 25일 인민군 창건 81주년을 맞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약식 열병행사'를 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김씨의 군 업적을 부각했다고 연합뉴스가 25일 전함.
- 북한군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의 광장에서 분열행진을 하며 김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다짐함.
- 조선중앙TV도 이날 저녁 1시간가량 이 행사를 녹화중계했으며,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과 김명식 해군사령관,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 김락겸 전략로켓 사령관 등 군 지도부가 남한과 미국을 겨냥해 "남해를 놈들의 최후멸망의 무덤으로 만들겠다" "미제는 진짜 핵전쟁 맛이 어떤 것인지 느끼게 될것" 등의 발언으로 위협함.

北 김정은, 軍 창건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4/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5일 인민군 창건 81주년을 맞아 김일성·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금수산태양궁전을 방문해 김일성·김정일의 입상에 인사한 뒤 조부와 부친의 시신이 있는 '영생홀'을 차례로 찾아 참배함.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현영철 군 총참모장, 김격식 인민무력부장, 김경희·박도춘 노동당 비서, 현철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영춘·리용무·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김창섭 국가안전보위부 정치국장, 리병삼 인민보안부 정치국장 등이 수행함.

北 김정은 부부, 주민종합편의시설 '해당화관' 방문(4/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개업을 앞둔

주민편의시설 '해당화관'을 돌아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1~2층의 상점, 식사실을 찾아 시공정형과 봉사(서비스) 계획을 점검한 뒤 철판구이집을 돌아보고 요리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어 목욕탕, 물놀이장을 비롯한 다른 시설을 방문하고 "오늘 해당화관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만점"이라며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함.

– 이날 김 제1위원장의 해당화관 방문에는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현영철 군 총참모장, 김격식 인민무력부장, 김경희 · 김기남 · 최태복 · 김양건 · 김영일 · 김평해 · 곽범기 · 문경덕 노동당 비서, 강석주 내각 부총리, 오일정 · 백계룡 당 부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 제1부부장 등이 수행함.

■ **김정은동향**

- 4/26, 김정은 黨 제1비서, 4.25 '인민군창건 81돌'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4.26,중통·중방)
  -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 장성택, 현영철, 김격식, 김경희, 박도춘, 김영춘, 리용무, 현철해, 김원홍, 오극렬, 최부일, 주규창, 김창섭, 리병삼 등 참가
- 4/28, 김정은 黨 제1비서, 리설주와 함께 개업을 앞둔 '해당화관' 시찰(4.28,중통·중방·평방)
  - 박봉주, 최룡해, 장성택, 현영철, 김격식, 김경희, 김기남, 최태복, 강석주,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곽범기, 문경덕, 오일정, 백계룡, 한광상 등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박봉주 총리 참가下 '김정은이 당중앙위 3월전원회의에서 제시한 병진노선·전국경공업대회의 과업 관철 및 1·4분기 인민경제발전계획 평가와 2·4분기 대책' 등 논의(4.22,중통)
  - △경제건설과 핵억제력을 다지기 위한 과업과 방도 △대외경제사업 강화하여 미국과 反北세력의 제재와 봉쇄책동을 짓부수고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과업과 방도 제시
- 박봉주(내각 총리), 黃南道內(해주시 비료공장·남새온실 및 청단군 청정협동농장과 강령군 부민협동농장) 농사실태 현지 요해(4.23,중통)
  - 이에 앞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현대화사업도 요해
- 【인민군 창건(4.25) 81주년 관련 동정】
  -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사회), 현영철(보고), 김격식, 박도춘, 김영춘, 양형섭, 리영무, 강석주, 오극렬, 현철해, 김원홍, 주규창, 김창섭, 최부일, 리병삼 등 참가
  - 국방공업부문에서 당의 군사전략사상과 병진노선을 높이 받들고 정밀화, 소형화된 핵무기들과 그 운반수단들을 비롯한 보다 위력한 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며,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하겠다고 강조
  -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 김격식,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김영춘, 양형섭, 강석주, 현철해, 김원홍, 김양건, 곽범기, 문경덕, 주규창, 김창섭, 로두철, 최부일, 리병삼, 조연준 등 참가
- '인민군창건 81돌' 즈음 경축연회, 4.25 김정은 등 참가下 목란관에서 진행(4.26,중통·중방)
  -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 장성택(축배사) 등 국가 책임일군들과 駐北 여러나라 외교대표부부·무관부부들 참석

나. 군사

○ 北, 서해서 공·지 합동화력훈련 준비 징후(4/28, 연합뉴스)

– 북한이 동해안으로 전개한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해안에서 대규모 공·지 합동화력훈련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28일 연합뉴스가 전함.

– 정부의 한 소식통은 28일 "북한이 서해안 남포 인근지역에서 항공기와 지상의 포병전력을 동원하는 합동화력훈련을 준비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훈련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다. 경제

○ 화학비료 부족한 北, 농사철 유기질비료 생산 독려(4/23, 조선중앙방송)

– 화학비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이 올 농사철을 맞아 유기질비료 생산을 독려하고 있어 눈에 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3일 전함.

– 북한 매체들은 여러 지역에서 자체로 다양한 유기질비료를 생산해 농촌

에 공급하는 사례들을 소개하며 생산의욕을 돋우고 있음.

– 조선중앙방송은 23일 "(양강도) 대홍단군 미생물복합비료공장 종업원들이 생산설비를 자동흐름식으로 기술개건(개조)해 아미노산 미량원소복합비료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전함.

○ **유엔 "北 봄철 농작물 작황 작년보다 나을 것"(4/23,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의 올 봄 농작물 작황이 작년보다 나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함.

– FAO는 북한의 올해 기상 여건이 좋아 보리, 밀, 감자 등 오는 6월부터 수확되는 농작물 작황이 작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내다봄.

– 북한 곡물 생산량의 95%를 차지하는 쌀과 옥수수의 파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함.

○ **'마그네사이트 寶庫' 단천, 북한 새 경제기지 될까(4/25, 연합뉴스)**

– 북한의 대표적인 비철금속 생산지역인 함경남도 단천이 김정은 정권에서 새로운 경제발전 기지로 주목받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5일 전함.

– 단천은 세계적 규모의 마그네사이트와 아연 등의 광물이 풍부한 것으로 유명하다. 북한은 이 지역의 지하자원 수출을 목표로 2009년 7월 단천항 건설을 시작해 작년 5월 준공식을 함.

○ **北 만포시에 중소형 발전소 준공(4/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자강도에 만포연하발전소 완공돼 26일 준공식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만포연하발전소는 장자강에 세워진 중소형발전소로 자강도 만포시의 공장, 기업소, 주택 등에 전기를 공급함.

– 박봉주 내각 총리와 박도춘 노동당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준공식에 참석했고 박 총리는 발전소 건설의 기여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 감사문을 전달함.

라. 사회 · 문화

○ **北 대동강에 '유람선 식당' 개업(4/25,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군 창건 81주년인 25일 평양 대동강에 식당으로 전용되는 대동강호의 개업식이 열렸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함.

– 박봉주 내각 총리는 개업사에서 "식당배 대동강호 개업식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낙관을 안겨주는 또 하나의 경사"라며 "대동강호는 김정은 원수님의 애국헌신이 안아온 인민사랑의 결정체"라고 말함.

– 대동강호는 한 번에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식당과 연회장 등을 갖춘 2층 구조로 길이 68.98m, 폭 26m, 배수량 820t의 규모임.

○ **北 휴대전화 가입자 200만명 육박(4/27, 노스코리아테크)**

– 북한의 3G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200만명에 육박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가 27일 전함.

– 평양에 있는 '고려링크'의 에즈 헤이칼 대표는 이번 주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고,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오라스콤 텔레콤 본사에서도 이를 확인했다고 노스코리아테크는 설명함.

○ **北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재판 회부"(종합)(4/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가 북한 최고재판소의 재판에 회부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지난해 11월3일 나선시에 관광 명목으로 입국했다가 체포된 미국공민 배준호에 대한 예심이 전부 끝났다"며 "배준호는 가까운 시일 내에 최고재판소에 기소돼 판결을 받게 된다"고 전함.

– 중앙통신은 "예심과정에서 배준호는 공화국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공화국을 전복하려고 책동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대해 전부 인정했으며 그의 범죄는 증거물들에 의해 명백히 입증됐다"고 주장함.

○ **北 직업·청년동맹 '병진노선' 관철 전원회의(4/2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근로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28일 평양에서 각각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北 최신 편의시설에 한국 화장품 브랜드 간판 눈길(4/28, 조선중앙TV)**

– 북한 조선중앙TV가 2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개업을 앞둔 대동강변 주민종합편의시설 '해당화관'의 화장품 매장을 둘러보는 모습이라며 소개한 사진에 화장품 브랜드 간판 '라네즈', '로레알', '랑콤' 등이 포착됨.

2. 대외관계

가. 일반

○ **北 대사, 몽골에 식량지원 검토 요청(4/22, 인포몽골리아)**

– 몽골 주재 북한 대사가 몽골 대통령에게 북한의 식량 사정이 심각해질 수 있다면서 식량 지원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몽골 매체인 인포몽골리아가 22일 전함.

– 홍규 신임 몽골 주재 대사는 지난 16일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자리에서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을 것"이라며 몽골이 대북 식량 지원 가능성을 검토해주기를 요청했다고 매체가 22일 전함.

– 홍 대사는 엘벡도르지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방

북 초청의사도 전달하면서 북한이 경제개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함.

○ **조선신보, 어나니머스 해킹 후 홈페이지 회원제 폐지(4/22, 조선신보)**
- 국제 해커그룹 어나니머스(Anonymous)에 의해 홈페이지를 해킹당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2일 당분간 홈페이지를 회원등록제로 운영하지 않기로 함.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조선신보는 이날 "전자판 조선신보는 당분간 신규회원 등록접수를 중단하고 회원과 비회원을 구분하지 않는 공개방식으로 운영한다"라며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힘.

○ **北총리, 中에 지진피해 위로전문(4/2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박봉주 내각 총리는 22일 중국 쓰촨(四川)성에서 발생한 지진피해와 관련해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에게 위로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전함.
- 박 총리는 전문에서 중국 정부와 국민,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로의 뜻을 표시하고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영도 밑에(아래) 피해지역 인민들이 이번 자연재해의 후과(결과)를 하루빨리 가시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 **러시아 사할린주 대표단, 이달 북한 방문(4/23, 자유아시아방송(RFA))**
- 러시아 사할린 주(州) 대표단이 이르면 이달 중에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전함.
- RFA는 러시아의 인터넷 매체인 '보스토크 미디어'를 인용해 북한과 러시아가 무역 및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활발히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보도함.
- 보스토크 미디어는 북러 양국이 농업, 건설, 임업, 어업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사할린주 지역 기업이 포함된 대표단이 방북해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 확대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北, 미국 인권보고서 비난…"정권 붕괴 노린 음모"(4/23, 조선중앙방송)**
- 북한 외무성은 23일 미국이 최근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문제삼은 데 대해 "우리 사회주의 제도를 무너뜨리려는 음모"라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함.
-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반미 자주적인 나라들의 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침략과 간섭의 도구라는 데 미국의 인권보고서의 반동성과 위험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힘.

○ **北 "日 야스쿠니 참배는 재침 노리는 망동" 비난(4/2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4일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를 비롯한 일부 일본 각료와

국회의원들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를 강하게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24일 전함.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진자(신사)에서 뻗어나가는 군국주의 독뿌리'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조선과 아시아 나라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도발행위"라고 규정함.
- 논평은 "일본에서 야스쿠니 신사를 통한 파시즘 문화의 적극적인 부식(뿌리를 박아 심는 것)은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려 또다시 재침의 길에 나서려는 무분별한 망동"이라며 일본이 과거 범죄를 찬양하고 군국주의를 고취하고 있다고 맹비난함.

北매체에 다시 늘어난 중국뉴스…中에 기대 반영(?)(4/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베이징발로 "중국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허기량(쉬치량 · 許其亮)이 얼마 전 베이징군구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하면서 부대의 정치사상사업에 힘을 넣을 데 대해 언급했다"고 보도함.

나. 6자회담(북핵)

北, 국제제재 '동병상련' 이란과 돈독한 관계 과시(4/22, 노동신문)

- 양국이 원유 수출입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2일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란 핵문제와 관련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의 정책을 비판함.
- 노동신문은 이날 '이란 핵문제를 둘러싼 마찰'이라는 개인 필명의 글을 통해 이란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경제적 제재와 안보적 압박 사례를 소개한 뒤 "제반 사실은 이란을 적대시하는 미국의 정책이 변화되지 않는 한 이란 핵문제의 해결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함.

北, 연일 "비핵화회담 안돼"…평화회담 의도(4/23, 연합뉴스)

- 북한 매체들이 미국의 비핵화 회담 요구에 연일 부정적 입장을 쏟아내며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전함.
- 북한은 지난 18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조치 철회 ▲군사훈련 중단 등을 한국과 미국의 대화 요구 조건으로 내세운 뒤 각종 매체를 동원해 자신들의 의도대로 대화 의제를 구체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임.
- 북한의 입장은 한마디로 과거와 같이 북한에만 비핵화를 요구하는 회담이 아니라 북미 간 평화협정을 위한 회담을 원하는 것으로 요약됨.

北 총참모장 "핵무기와 운반수단 더많이 만들어야"(4/24, 연합뉴스)

- 북한의 현영철 인민군 총참모장은 24일 "정밀화, 소형화된 핵무기들과 그 운반수단들을 비롯한 우리식의 위력한 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24일 전함.

– 현 총참모장은 이날 북한 인민군 창건(4월25일) 81주년을 하루 앞두고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의 보고에서 "국방공업부문에서 우리 당의 군사전략사상,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을 높이 받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힘.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北조평통, 독수리연습 비난…"도발 중지해야"(4/24,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4일 이달 말까지 계속될 한미 '독수리연습'을 비난하며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연합뉴스가 24일 전함.

– 조평통은 이날 서기국 보도에서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최절정에 이르고 있다"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군사훈련축소'요, '수위조절'이요, '대화'요 하며 너스레를 떨던 미국과 괴뢰패당이 더욱 광란적 소동을 피우고 있는 것은 그들의 반공화국 적대시정책과 침략적 속심(속내)이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을뿐 아니라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함.

– 조평통은 또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자멸을 원치 않거든 북침전쟁연습을 당장 걷어치우고 우리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와 도발책동을 중지해야 한다"며 남한과 미국에 "대화냐 대결이냐, 평화냐 전쟁이냐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함.

나. 경제·사회·문화

北 "개성공단 폐쇄 위기는 남측 책임" 거듭 주장(4/22, 노동신문)

– 북한이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 2주일을 맞은 22일 현 사태의 책임을 남한에 돌리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전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절대로 통할 수 없는 책임회피 놀음'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 어떤 궤변과 모략 소동으로도 괴뢰패당은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최악의 위기에 몰아넣은 범죄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함.

– 신문은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파탄시키기 위한 괴뢰들의 책동은 현 정권 하에서 더욱 노골화됐다"며 "괴뢰들은 고의적인 긴장격화 책동으로 개성공업지구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평화적 분위기를 여지없이 파괴했다"고 비난함.

北, 개성공단 회담 수용 시한 넘겨 무반응(4/26, 연합뉴스)

– 북한이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남북실무회담의 수용시한으로 정한 26일 오전을 넘겼지만 회담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연합

뉴스가 26일 전함.
- 정부 당국자는 26일 낮 "정오가 지난 지금까지 북한으로부터 들어온 답변은 없다"고 확인함.
- 북한 매체도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음.

北, 회담 거부…"우리가 먼저 중대조치 취할 수도"(종합)(4/26,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 국방위원회는 26일 정부의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에 대해 "우리를 우롱하는 최후통첩식 성명"이라고 비난하면서 "남조선 괴뢰패당이 계속 사태의 악화를 추구한다면 우리가 먼저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중대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힘.
-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북남관계를 전쟁국면에 몰아 넣은 주범들이 기만적인 당국간 회담설이나 내돌리며 우리에게 최후통첩식 중대조치라는 것을 운운해 댄다면 그것은 최후 파멸만 촉진케 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전함.

北 "전쟁책동 계속되면 대화 없어"(4/26, 평양방송)
- 북한의 대외용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은 26일 논평을 통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 괴뢰들의 북침전쟁 책동이 계속되는 한 조미대화든 북남대화든 없을 것"이라고 밝힘.

정부,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철수 결정(종합2보)(4/26, 연합뉴스)
- 정부는 26일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제의를 북한이 거부하고 개성공단 사태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측 체류인원 전원의 철수를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정부는 ▲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에 대한 북한의 거부 ▲ 개성공단 통행 차단 및 북측 근로자 일방 철수 등 북한의 공단운영 중단조치 지속 ▲ 우리 기업의 방북 불허 등을 이번 결정의 이유로 설명함.

개성공단 오늘 126명 귀환…50명 29일 철수(4/27, 연합뉴스)
- 개성공단에 머물던 우리 측 체류인원 115명이 27일 오후 4시20분께부터 차량 59대에 나눠 타고 귀환하기 시작했고 115명 중에는 중국인 1명도 포함돼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北 "개성공단 폐쇄되면 南 책임…비싼 대가 치를 것"(종합)(4/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7일 정부의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 철수 결정을 비난하면서 개성공단 완전 폐쇄의 책임은 남측이 지게 될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힘.
- 북한의 개성공단 담당 실무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대변인은 이

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개성공업지구 운명은 지금 경각에 이르렀다"며 "개성공업지구가 완전히 폐쇄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괴뢰패당이 지게 될 것"이라고 전함.

○ **北 "김관진 장관 '괴소포 사건'은 민심의 조롱" 주장(4/28, 노동신문)**

– 북한은 28일 최근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위협 문서가 담긴 '괴소포'가 배달된 것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제 죽을 줄도 모르고 불 속에 뛰어드는 부나비처럼 분별없이 날치는 역도에 대한 민심의 조롱, 항거의 표시"라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주장함.

– 신문은은 이날 '호전광이 받은 경고장'이라는 단평에서 "지금 남조선의 각 계층 인민들은 쩍하면 호전적 망발을 내뱉으며 전쟁의 불집을 터치지 못해 지랄발광하는 호전광 김관진을 한목소리로 단죄규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기타 (대남)**

- 개성공업지구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유감 표명 관련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광대극'이라고 왜곡하며 재차 '중대조치 선포의 정당성'과 사태 責任轉嫁(4.24,평방/개성공업지구 사태의 주범은 누구인가)

● 북한연구센터 제공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중국군 총참모장 "북한 4차 핵실험 가능성"〉(4/23, 연합뉴스)**

- 팡펑후이(房峰輝)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을 거론했음. 예상 시기나 규모 등 구체적인 정보는 제시하지 않았음. 22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와 외신에 따르면 팡 참모장은 중국을 방문 중인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과 이날 회담하고 나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음.
- 뎀프시 의장은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에 유일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팡 참모장 초청에 답하는 형식으로 중국을 방문 중임.
- 팡 참모장은 회견에서 "북한은 이미 3차 핵실험까지 수행했다. 그리고 4차 실험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음.
- 중국 정부나 고위 관료가 좀체 '섣부른' 예상이나 전망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실체가 있는 것이라는 분석과 예상 시기 등 세부 사항을 언급하지 않아 대화 재개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자 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동시에 나옴.
- 팡 참모장은 중국은 북한 핵실험을 단호하게 반대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제재 결의를 지지한다면서 북핵 해법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평화적인 대화'이고 6자회담 재개라고 되풀이해 강조했음.
- 그는 "북한이 핵실험과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도록 설득하려면 모든 당사국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 대화가 국제 사회의 우려를 해결할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음.
-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중국 측의 평가를 묻는 말에 팡 참모장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는 비핵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에둘러 말했음.
- 팡 참모장은 아울러 미국 행정부와 기업 등을 겨냥해 중국군이 해킹 공격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중국도 해킹 피해국이고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용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음.
- 그는 "사이버 공간에서 안보가 통제를 잃거나 인터넷 보안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영향은 과장하지 않고 말하건대 때로 핵폭탄 못지않다. 그러나 인터넷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어디서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진원을 콕 집어내기는 아주 어렵다"고 말했음.
- 이밖에 미국과의 군사 부문 협력·교류 필요성을 내세우며 "태평양은 미

국과 중국을 모두 충분히 끌어안을 만큼 넓다. 어떤 상황에서도 협조적인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답했음.

- 뎀프시 의장은 미군의 '아시아 재균형(리밸런싱)' 전략은 중국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설명했음.
- 그는 "내 방문 목적은 꽤 간단하다.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이 모든 국가의 이해관계에 들어맞는다. 오늘 팡 참모장과 대화한 주제 중 하나도 미국이 이 지역 안정을 꾀한다는 것이다. 미군의 주둔이 아니라 미군의 부재(不在)가 불안정 요인"이라고 주장
- 그는 또 이 전략이 더 많은 숫자의 군대를 이 지역에 배치하자는 게 아니라 이해에 더 관여하고 더 참여하며 장비·시설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소개했음.
- 이어 "여러 현안을 토의했고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됐을 뿐이다. 양국은 더 깊고 지속적이며 나은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 두 군사 지도자는 쓰촨성 지진과 보스턴 마라톤 대회 폭발 테러 등과 관련해서도 서로 위로를 전했음. 전날 한국에서 정승조 합참의장 등을 만나고 중국으로 건너간 뎀프시 의장은 이번 주 일본도 방문할 계획임.

나. 미·북 관계

○ 〈北, 미국 인권보고서 비난…"정권 붕괴 노린 음모"〉(4/23,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은 23일 미국이 최근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문제 삼은 데 대해 "우리 사회주의 제도를 무너뜨리려는 음모"라고 비난했음.
-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반미 자주적인 나라들의 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침략과 간섭의 도구라는데 미국 인권보고서의 반동성과 위험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음.
- 담화는 "저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들에 인권유린의 감투를 씌우고 끈질긴 인권타령으로 그 나라들의 내부에 쉬를 슬어(불온한 사상을 퍼뜨려) 불순세력을 배양하는 것이 미국의 상투적인 수법"이라면서 "지금 미국은 우리를 군사적으로 덥치기가 힘들게 되자 이 비열한 수법에 더욱더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음.
- 담화는 또 "미국이 제도 전복을 노린 적대시 정책을 노골화할수록 우리는 제도 수호를 위한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우리 식대로 미국의 인권타령을 철저히 짓부셔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 미국 국무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발표한 '2012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개탄스럽다(deplorable)"며 "탈북자들은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형을 비롯해 실종, 임의적 감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北, 연일 "비핵화회담 안돼"…평화회담 의도〉(4/23, 연합뉴스)

- 북한 매체들이 미국의 비핵화 회담 요구에 연일 부정적 입장을 쏟아내며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음.

– 북한은 지난 18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조치 철회 △군사훈련 중단 등을 한국과 미국의 대화 요구 조건으로 내세운 뒤 각종 매체를 동원해 자신들의 의도대로 대화 의제를 구체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임.
– 북한의 입장은 한마디로 과거와 같이 북한에만 비핵화를 요구하는 회담이 아니라 북미 간 평화협정을 위한 회담을 원하는 것으로 요약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명백히 대답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만약 우리와 미국이 마주앉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핵보유국들 사이의 대화이지 어느 일방이 핵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마당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 지난 20일자 노동신문도 "우리와 미국 사이에 군축을 위한 회담은 있어도 비핵화와 관련된 회담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음.
– 북한이 최근 6자회담을 잇달아 언급하며 미국을 비난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힘.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굴욕적인 협상탁에는 마주앉을 수 없다'라는 기사에서 "2006년에 미국이 들고 나온 대화타령은 조선에 대한 압살 기도를 위장하기 위한 연막에 지나지 않았다"며 "6자회담 재개를 합의하기 바쁘게 돌아앉아 사상 최대규모의 '연합전시증원연습'에 미쳐 날뜀으로써 대화를 완전한 파탄에로 몰아갔다"고 주장했음.
– 중앙통신은 22일 논평에서도 "6자회담 역시 미국이 대조선압살 야망실현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해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밝혔음.
– 북한 입장을 비공식으로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도 같은날 시론에서 "조선반도를 둘러싼 현 정세는 60년간 지속된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새로운 단계의 조미대화의 시작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 북한은 이미 지난 1월23일 외무성 성명에서도 "앞으로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음.
– 이처럼 북한의 핵 포기만을 위한 그간의 6자회담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는 북한과 미국이 동등한 자격으로, 즉 '핵보유국 간 대화'나 '군축회담,' 평화협정 체결 회담 등에만 응하겠다는 입장을 시종일관 강조하는 것임.
– 북한이 이처럼 평화협정 체결을 강하게 제기함에 따라 앞으로 북미 간 대화에서 이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부각할 공산이 적지 않다는 분석
– 실제로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 남한에 대한 위협을 완화하고 대화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달 말 '독수리연습'과 다음 달 초 한미정상회담이 끝나면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바뀔 개연성에 주목하고 있음.

〈北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재판 회부"〉(4/27, 연합뉴스)

–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가 북한

최고재판소의 재판에 회부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

- 중앙통신은 "지난해 11월3일 나선시에 관광 명목으로 입국했다가 체포된 미국공민 배준호에 대한 예심이 전부 끝났다"며 "배준호는 가까운 시일 내에 최고재판소에 기소돼 판결을 받게 된다"고 전했음.
- 중앙통신은 "예심과정에서 배준호는 공화국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공화국을 전복하려고 책동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대해 전부 인정했으며 그의 범죄는 증거물들에 의해 명백히 입증됐다"고 주장했음.
- 중앙통신은 그러나 배 씨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음. 중국에서 북한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는 배씨는 지난해 11월 외국 여행객들을 인솔해 함경북도 나진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갔다가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음.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배씨의 재판 회부를 공개한 것은 미국을 압박하고 향후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북한은 2009년 3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취재 중이던 미국인 여기자 2명과 2010년 11월 한국계 미국인 전용수씨 등 수차례 미국인을 억류하고 재판에 회부해 이를 공개한 뒤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미 고위층 인사의 방북을 유도하는 등 압박과 협상의 기회로 활용해왔음.

다. 중 · 북 관계

〈北매체에 다시 늘어난 중국뉴스…中에 기대 반영(?)〉(4/25, 연합뉴스)

- 북한 매체들이 한동안 외면했던 중국 관련 소식을 신속히 다루고 있어 눈길을 끔.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가 지난 1월 말 발표된 후 중국 소식을 전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 이달 20일 중국 쓰촨성 지진을 기점으로 다시 중국 뉴스가 늘어났음.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베이징발로 "중국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허기량(쉬치량 · 許其亮)이 얼마 전 베이징군구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하면서 부대의 정치사상사업에 힘을 넣을 데 대해 언급했다"고 보도했음.
- 통신은 이날 류옌둥(劉延東) 중국 부총리가 최근 장쑤성, 상하이시, 저장성 등지를 방문해 조류 인플루엔자(AI) 예방 · 통제 상황을 파악했다는 소식도 전했음. 조선중앙방송도 이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AI 발생과 관련해 해당 부문에 중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음.
- 앞서 조선중앙통신, 평양방송 등 북한 매체들은 중국 쓰촨성 지진이 발생한 이달 20일부터 지진 피해소식과 함께 중국에서 AI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소식을 연일 전했음.
- 지진과 관련해 박봉주 내각총리가 지난 22일 리커창 중국 총리에게 위문전문을 보낸 소식도 당일로 소개했음. 북한 매체들이 중국 고위 인사들의 동정을 신속하게 보도한 것은 최근 들어 이례적인 일
- 지난 1월 말 안보리 추가 제재 결의가 나온 이후 북한 매체는 중국에서

김일성화 · 김정일화 축전이 열렸다는 등의 간단한 소식은 전했으나 중국 주요 인사의 동정은 거의 보도하지 않았음.

- 특히 북한 매체는 지난달 3일 개막한 중국의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최 소식을 열흘이나 지나 보도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소식도 한참 후에 전했음.
- 이번 '양회'(정협과 전인대)는 시진핑 국가주석-리커창(李克强) 총리 체제가 공식 출범하면서 10년 만에 중국 지도부 교체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행사임에도 보도에 한동안 뜸을 들인 것임.
- 이 때문에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한 중국에 대한 서운함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왔음.
-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 중국 관련 소식을 적극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한 데는 최근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노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옴.
- 현재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 우다웨이(武大偉)가 미국에서 미국 당국자들과 한반도 현안을 논의한 후 중국의 고위 인사가 방북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의 역할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음.

라. 일 · 북 관계

〈北 "日 야스쿠니 참배는 재침 노리는 망동" 비난〉(4/24, 연합뉴스)

- 북한은 24일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를 비롯한 일부 일본 각료와 국회의원들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를 강하게 비난했음.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진자(신사)에서 뻗어나가는 군국주의 독뿌리'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조선과 아시아 나라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도발행위"라고 규정했음.
- 논평은 "일본에서 야스쿠니 신사를 통한 파시즘 문화의 적극적인 부식(뿌리를 박아 심는 것)은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려 또다시 재침의 길에 나서려는 무분별한 망동"이라며 일본이 과거 범죄를 찬양하고 군국주의를 고취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음.
- 논평은 이어 "침략과 살육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를 거점으로 일본 사회 전반에 군국화의 뿌리를 변함없이, 더 깊이 뻗쳐나가려는 아베 내각의 흉심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직접 비난했음.
- 논평은 특히 "강요되는 전쟁문화, 파시즘 문화의 난무로 일본은 아시아 나라들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시대적 고립과 소외의 나락으로 더더욱 떠밀리고 있다"고 강조했음.
- 한편,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이 각종 침략 전쟁에서 숨진 이들을 추도하기 위해 만든 시설로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14명이 합사돼 있으며, 최근 일본 각료 3명과 국회의원 168명이 참배해 한국과 중국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음.

마. 기 타

〈北, 국제제재 '동병상련' 이란과 돈독한 관계 과시〉(4/22, 연합뉴스)

- 핵 관련 활동 등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북한과 이란이 최근 돈독한 양국 관계를 과시해 주목됨. 양국이 원유 수출입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2일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란 핵문제와 관련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의 정책을 비판했음.
- 노동신문은 이날 '이란 핵문제를 둘러싼 마찰'이라는 개인 필명의 글을 통해 이란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경제적 제재와 안보적 압박 사례를 소개한 뒤 "제반 사실은 이란을 적대시하는 미국의 정책이 변화되지 않는 한 이란 핵문제의 해결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음.
- 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보유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때문이고 이것이 철회되지 않는 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북한의 기존 주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음.
- 노동신문은 또 이란이 최근 새로운 우라늄 생산 시설을 가동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해서 "이란의 이러한 평화적 핵 활동은 나라의 자주권에 속하는 권리행사로서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다"고 강조했음.
- 이 역시 북한이 우라늄 농축 활동을 경수로 건설과 연계하며 전력 생산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임.
-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과 이란이 원자력 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우라늄 농축 활동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고농축 우라늄 방식의 핵무기 개발도 추진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음.
- 북한과 이란이 원유 수출입과 관련된 협상을 진행하는 것도 눈길을 끔. 로스탐 카세미 이란 석유장관은 지난 20일 북한으로의 석유 수출을 고려하고 있으며 양국 정부 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음. 북한의 배학내각 원유공업상이 이란에서 열리는 원유 · 가스 · 정제 및 원유화학 국제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16일 테헤란을 방문한 것은 이 때문으로 보임.
- 장거리 로켓과 핵무기 개발이 북한과 이란의 안보적 이해가 일치하는 사안이라면 원유 수출입은 양국의 경제적 이해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문제
- 세계 4대 산유국인 이란은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원유 수출입이 자유롭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북한도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차단 가능성을 우려해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임.
- 서정민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동아프리카학과 교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대이란 금수조치가 가동되고 있어 이란이 작년부터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란과 북한의 협력은 현재 양국이 직면한 대외관계를 돌파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전작권 전환' 철저 검증후 재검토 여부 결정〉(4/22,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내년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여건과 준비 작업 등을 본격적으로 검증함.
- 복수의 정부 고위 소식통은 22일 "내년부터 우리 군이 전작권을 넘겨받는 데 필요한 준비와 여건이 되어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면서 "내년에 두 차례 검증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음.
- 한미는 내년 3월과 8월에 진행될 키 리졸브(KR) 연습과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통해 기본운용능력(IOC)을 점검하고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할 계획임.
- 한 소식통은 "2015년 8월에 최종 검증(FMC)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최종 검증 때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한국군의 준비 상황 등이 최종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음.
- 전작권 최종 검증 단계에서 한반도 안보 불안상황이 지금보다 더 고조되고 전면전이 발발했을 때 초기에 한국군 단독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면 전환 계획은 재검토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가 전작권 전환 작업을 철저하게 검증한 다음 일정 연기 또는 재검토 여부 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문제는 '정치적 협상'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음.
- 다른 소식통은 "애초 올해 8월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 방식으로 진행될 UFG 연습 때 전작권 전환 준비작업을 검증할 계획이었다"면서 "하지만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적용될 새로운 지휘관계를 올해 확립하고 나서 내년부터 검증 작업을 하자는데 한미 당국 간에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음.
- 현재 한미는 유사시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작권을 2015년 12월 한국 합참의장에게 넘긴다는 합의 일정에 따라 전환 작업을 진행 중임. 양국은 '전략동맹 2015'에 의해 전작권 전환 작업을 70%가량 달성했음.
- 미국의 일부 정치권 인사와 예비역 장성들은 전작권 전환 작업 중단을 주장하고 있음.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최근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은 전작권 이양 논의를 영구적으로 미뤄야 한다"면서 "전시작전권 이양을 지지해온 자신의 뜻을 공식 수정한다"고 밝혔음.
- 김관진 국방장관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나도 그(벨 사령관) 편지를 받았으며, 소홀히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개인 이름으로 보냈기 때문에 사견으로 생각하며, 한미 합의 사항은 절차대로 시행하되 여러 가지 검토 단계가 있다"고 말했음.
- 김 장관은 "이미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대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다만 앞으로 안보상황과 (전작권 전환) 준비상황에 대한 검증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음.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

서 "전작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우리 군의 기존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음.

○ 〈한미원자력 협상 2년반…'농축'은 제자리〉(4/24, 연합뉴스)

- 한미 양국이 현행 원자력협정 2라운드 협상에 들어가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진행됐던 협상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양국은 201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2년 반 동안 협상을 진행해 왔음.
- 우선 원전 산업이나 원전 기술 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음. 한미 양국의 원전 산업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만큼 다른 사안에 비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논의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음.
- 정부 당국자는 24일 "미국이 세계 최대의 원전 이용국이지만 인프라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반해 우리 산업은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면서 "서로 궁합이 맞는 파트너"라고 평가했음.
- 이런 차원에서 한국 원전의 해외 수출시 원자력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미국이 보장해주는 방안, 우리나라 원전 수출과 관련된 미측의 핵심 설비 반출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양국 간 협력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음.
-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흡하기는 하지만 약간의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한미 양국은 현재 공동으로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이 연구는 일단 2020년까지 계속되는데 양국은 이 연구 결과를 협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중임.
- 파이로프로세싱 공동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재처리와 관련한 우리 입장이 개정 협상에 일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정부 고위소식통도 "기울기가 완만하기는 하지만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논의도 진전이 있다"고 전했음.
- 다만 미국의 강한 핵비확산 정책 때문에 우리가 일본처럼 재처리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 양국은 또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는 별도로 사용후 핵연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핵주기 공동 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양자·다자 협력 방안도 모색중임.
- 그러나 핵심적인 관심 사항 중 하나인 우라늄 농축 문제는 논의의 진전이 별로 없음. 북한 및 이란의 핵 문제 등으로 우라늄 농축 문제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이 다른 사안보다 높다는 것이 그 이유
- 한편, 원자력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고위관료는 "외교부는 원래 저농축 문제는 아예 포기하고 미국과 재처리 문제만 좀 완화해서 하려고 했다"면서 "2년 뒤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퇴임하기 1년 전으로 지금 외교부 마인드를 갖고는 2년을 갖고도 안된다"고 주장
- 그는 "협상 시한 연장 카드는 미국에서 지난해 들고 나왔다고 들었다"고 전했음. 한편, 정부는 1991년 북한과 함께 핵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한 상태임.

– 이 때문에 국내에 재처리와 농축시설을 갖추려면 이 선언부터 먼저 변경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음.

〈한 · 미 해병대, 포항서 연합 상륙훈련〉(4/26, 연합뉴스)

– 한미연합사는 26일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일대 해상에서 전개된 한 · 미 연합 상륙훈련 현장을 공개했음. 지난 21일부터 포항시 일대에서 시작한 훈련은 양국 해군 · 해병대의 상륙작전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오는 28일까지 계속됨.

– 이날 훈련은 아군 병력의 내륙진출을 위한 해안 교두보 확보에 초점을 맞춰 진행. 한국 해군 · 해병대 · 육군 · 공군 등과 일본 오키나와에서 온 미 해병대 · 해군 등 두 나라 병력 3천500여 명이 참가했음.

– 특히 한 · 미 해병대는 이번 훈련에서 1개 중대씩을 맞바꿔 지휘. 훈련은 실전을 방불케 할 만큼 긴박하게 이뤄졌음.

– 오전 10시 10분께 송라면 독석리 해안으로부터 10여㎞ 떨어진 해상에서 한국 해병대원 20여 명씩이 탑승한 상륙돌격장갑차 8대가 흰연기를 내뿜으며 빠른 속도로 해안선에 접근

– 해안선에 다다를 무렵 황색 연막탄이 상공에 터졌으며, 완전 무장한 해병대원들이 상륙돌격장갑차에서 신속하게 내려 박격포 진지 등을 구축했음.

– 특히 미 해병대가 보유한 수직이착륙수송기인 '오스프리(MV22)' 3대가 한 · 미 해병대 상륙훈련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음.

– 또 해안선에 정박한 우리군 수송함인 4천t급 비로봉함에선 K-1 전차 2대와 각종 물자를 실은 군용차량 및 병력 등이 쏟아졌음.

– 해병대 한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최근 안보상황과 관련해 한 · 미 동맹의 공고함을 과시하고 한국 해병대가 최초로 연합 상륙군사령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음.

〈윤병세 "한반도, 북한 · 일본 문제 등 봄 같지 않아"〉(4/27,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7일 방한한 윌리엄 번스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음.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아시아 지역 순방차 서울을 찾은 번스 부장관을 만났음.

– 그는 영국 시인 T.S.엘리엇을 인용해 "4월은 '잔인한 달'"이라며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적 환경은 북한과 일본 문제 등 여러 사안 때문에 봄인 4월 같지 않다"고 말했음.

– 번스 부장관은 "많은 난제가 있지만 우리의 동맹과 협력 강화는 변함없다"면서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은 지금은 우리 동맹을 강화하기에 매우 적절한 시점"이라고 밝혔음.

– 양측은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방한 이후 변화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전날 발표된 정부의 개성공단 체류자 철수조치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음.

– 이날 접견에서도 다음 달 초로 임박한 박근혜 대통령의 첫 방미와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대해서도 막판 협의가 이뤄졌음.

– 번스 부장관은 이날 청와대를 찾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을 만나 개성공단 사태 등 한반도 안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음. 한편, 그는 28일 오전 마지막 아시아 순방국인 몽골로 출국할 예정임.

나. 한 · 중 관계

○ **〈韓 · 中 첫 외교장관 회담…한반도 '출구전략' 논의〉(4/24, 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의 지도부 교체 이후 양국 외교장관이 처음 만나 한반도 위기 타개 방안 등을 논의했음.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24일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만났음.

–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한국 · 미국의 대화 제안으로 중대 변환점을 맞이한 최근의 한반도 정세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위기의 출구 전략을 모색했음. 우리 측은 북한이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게 중국이 적극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음.

– 윤 장관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바탕을 둔 우리 측의 대화 제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비핵화를 논의하지 않고 핵 군축 회담만 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도 중국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음.

– 이에 대해 왕 부장은 한 · 미의 대화 제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 북한, 미국 등 당사국들이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다자 또는 양자 대화를 조속히 재개,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관측됨.

–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북한 핵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데 강한 공감대를 형성했음.

– 이와 관련해 윤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여러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추가 도발을 방지하고 다른 측면에서 긴장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음.

– 양국은 한반도 정세 등과 관련한 고위급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외교장관 간 핫라인을 개설하기로 합의했음. 아울러 윤 장관과 왕 부장은 양국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할 필요성에도 견해를 함께 했음.

– 특히, 중국 측은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자국에 첫 특사를 보내는 등 두 나라 관계 발전에 각별한 의지를 피력한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박 대통령의 집권 기간 한중 관계의 발전 잠재력이 크다는 기대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음.

– 왕 부장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윤 장관의) 이번 방중은 한 · 중 관계 발전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의 높은 관심을 잘 보여준다"며 "중국은 한 · 중 관계의 끊임 없는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부단히

심화하고자 한다"고 말했음.

- 아울러 박 대통령이 5월 방미 이후 중국을 찾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국은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관련한 협의도 진행했음. 오찬을 겸한 이날 회담에서는 각료와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로 한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 사이의 외교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과 관련해서도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음.
- 윤 장관은 그러나 회담 후 양국 간 대일 공조 논의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공조나 공동대응 문제는 아니고…"라고 말했음. 윤 장관은 외교장관 회담 직후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예방하고 이어 왕자루이(王家瑞) 당 대외연락부장과도 면담했음.
- 윤 장관은 중국 대북 외교의 한 축을 담당하는 왕자루이 부장으로부터 중국 새 지도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음.
- 한편, 왕자루이 부장은 "한반도 정세가 아주 중요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했다"고 말했고, 윤 장관은 "한반도 정세 완화를 위해 그 동안 왕 부장이 많은 노력을 해 준 것에 감사한다"고 화답했음.

◎ 〈"가까운 시일내 박대통령 방중, 양국 비전 공동성명"〉(4/26,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방중시 양국관계 비전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윤 장관은 이날 외교협회 정기총회 축사를 통해 "앞으로 가까운 시일내에 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윤 장관은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시 지난 20년의 한중 관계를 회고하면서 앞으로 20년의 양국 관계 비전과 로드맵에 대해 합의하고 공동성명도 채택할 것"이라고 전했음.
- 또 5월 한미 정상회담의 목표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친분 및 신뢰강화를 통한 성공적인 정상회담 △성공적인 미국 의회 합동연설 △동맹 6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 선언문 등을 제시했음.
- 윤 장관은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동맹 60주년을 기념하는 비전과 로드맵을 만들어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음.
- 이밖에 대(對) 러시아 외교와 관련, "박근혜 정부에서는 푸틴 정부의 동진정책과 아시아·태평양 중시 정책, 우리의 유라시아 정책을 접목해서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성과를 도출해보려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9월 상트페테르부르크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목표로 한·러 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소개했음.
- 윤 장관은 이어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아베 정권의 우경화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와 같은 추세가 일본의 국내 정치일정상 당분간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 이에 앞서 그는 이날 오후 동서대 일본연구센터가 개최한 한·중·일

국제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일부 일본 지도자들의 시대착오적, 역사퇴행적 언행은 새 동북아의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역내 국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개탄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했음.

- 윤 장관은 "한국의 새 정부는 불신 대결 구도를 신뢰 협력 구도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면서 "한 · 중 · 일 정상회담이 당초 예상보다는 지연되고 있지만 금년 중 너무 늦지 않게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음.

다. 한 · 일 관계

〈日각료 야스쿠니 참배 반발…윤병세, 방일 취소〉(4/22,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이번주 일본을 방문해 새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려던 일정을 취소키로 했음. 우리 정부의 수차례에 걸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본 각료들이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잇따라 참배한데 따른 반발로 보임.
-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윤 장관의 이번 방한은 한일 새 정부간 큰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런 분위기에 가봐야 생산적인 논의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이번에 방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음.
- 이 당국자는 "일본 내각의 2인자인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까지 신사 참배를 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음. 앞서 자민당 내각의 2인자인 아소 부총리 등 각료 3명은 춘계 예대제(例大祭 · 제사 · 4월21~23일)를 맞아 야스쿠니 신사에 잇달아 참배
- 지난달 취임한 윤 장관은 새 정부의 외교정책을 설명하고 한반도 정세 협의 등을 위해 주변국을 방문해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음. 윤 장관은 지난 2일 워싱턴을 방문한데 이어 24일에는 중국을 방문, 왕이(王毅) 외교부 부장 등 중국 지도부와 만날 계획임.
- 윤 장관은 이어 26~2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 과 회담을 가지는 방안을 추진해 왔음.
- 윤 장관의 방일 취소는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릴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일본 각료의 야스쿠니 참배로 인해 분위기가 악화된데다가 일본의 진전된 입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됨.
- 한편, 정부는 윤 장관의 방일을 앞두고 일본 각료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일본에 그동안 수차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음.

〈아베, '궤변' 공세…한일, 역사인식 갈등 심화〉(4/24,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침략의 역사를 부인한 데 이어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까지 정당화하고 나서면서 한일 간 역사인식을 둘러싼 충돌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양국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관

계 개선을 모색해온 한일관계는 당분간 갈등 국면을 지속할 전망

- 아베 총리는 2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서 한국, 중국이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등 각료 3명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난한 데 대해 "국가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영령에 대해 존경과 숭배의 뜻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참배를 대놓고 두둔하고 나섰음.
- 그는 특히 야스쿠니 참배로 외교상 마이너스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에 "국익을 수호하고 역사와 전통 위에서 자긍심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할 일"이라면서 "(참배 문제가 없다면) 관계가 좋아진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항변했음.
- 이 같은 발언은 일본 각료들의 야스쿠니 참배 등을 둘러싼 한국, 중국의 항의와 반발에 물러서지 않고 정면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됨. 우리 정부는 한일관계의 새로운 미래는 일본 지도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출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음.
-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간담회에서 일본의 극우화 움직임과 관련, "역사 인식을 바르게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은 채 미래지향적 관계로 개선하기는 어렵다"면서 "이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음.
- 박 대통령은 "우경화로 가면 동북아와 아시아 여러 국가 간 관계가 어려워질 것이고 일본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이 깊이 신중하게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음.
- 정홍원 국무총리는 아베 내각의 잇단 망언과 역사 왜곡에 대해 "역사를 후퇴시키는 언행으로 심히 우려되고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안정된 한일 관계를 위해선 올바른 역사인식에 바탕을 둔 신뢰관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음.
-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날 방중에 앞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항상 생각한다"고 강조했음. 우리 정치권은 "군국주의 망령의 부활"이라며 일본의 비뚤어진 역사인식을 규탄했음.
-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주일대사 소환과 야스쿠니를 참배한 일본 각료들의 입국금지 조치 등을 촉구하며 정부에 강력 대응을 주문

〈정부, 日대사 초치…"일그러진 역사인식 강력유감"〉(4/25, 연합뉴스)

- 정부는 25일 침략 역사를 부인하고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까지 정당화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발언과 관련, 벳쇼 고로(別所浩郎)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엄중 항의했음.
-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벳쇼 대사에게 "최근 일본 정부와 정계 인사들의 일그러진 역사 인식과 시대착오적인 언행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음.
- 그는 "우리로서는 일본 사회가 내부적으로는 그토록 정직과 신뢰를 소중한 가치로 여기면서도 과거 침략과 식민지 지배역사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과거를 뒤로하고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로는 극도의 안타까움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음.

- 그는 "일본이 역사의 거울 앞에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인해 이웃나라에 끼친 많은 고통과 피해를 생각하면서 과거를 정직하게 겸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오늘의 잘못된 인식과 언행을 바로잡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음.
- 벳쇼 대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음. 외교부가 일본 대사를 초치한 것은 아베 총리 등의 과거사 부정 발언에 대한 한국 내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됨.
- 일부 일본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이어 과거 침략 역사를 부인하는 발언까지 나오는 일본의 동향에 정부는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한편, 정부는 일본의 과거사 도발이 계속되면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일본에 전달하는 차원에서 적절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갖고 여러 대응 수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일본 "역사인식 문제 외교·정치 쟁점화 원치 않아"〉(4/25, 연합뉴스)**

-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침략 부인 발언 등으로 외교 갈등이 불거지자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관방장관이 "단편적인 발언이 아니라 전체적인 톤을 보고 우리의 역사 인식을 평가해달라"며 진화를 시도했음.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5일 오전 정례 회견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가 일본의 중요한 인접국인 한국·중국과의 관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역사 인식 문제를 외교·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바라지 않고 있다"고 밝혔음.
- 스가 장관은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등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어느 나라든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에게 존경의 뜻을 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옹호한 뒤 곧바로 "대국적인 관점에 따라 한국,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음.
- 역사 인식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에 큰 손해와 고통을 줬고, 국내외의 모든 희생자에게 애도의 뜻을 표시한다는 입장은 이전 내각과 마찬가지"라며 "단편적인 발언이 아니라 전체적인 톤을 보고 우리의 역사 인식을 판단하길 바란다"고 설명했음.
- 스가 장관은 또 5월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 "아직 (회담이) 정식으로 연기됐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며 "의장국인 한국이 조정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일본 자민당, 교과서 검정 기준 수정방침 확인〉(4/25, 연합뉴스)**

-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지지층의 표심을 끌어 모으려는 일본 집권 자민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음.

– 2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당 교육재생실행본부 특별 부회(部會) 첫 회의를 열고 교과서 검정 기준 중 '아시아 국가에 대한 배려'를 규정한 '근린 제국(諸國) 조항'을 수정한다는 방침을 확인했음.
– 특별부회 책임자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에게 "(2006년에) 개정된 교육기본법에 '타국에 경의를 표시한다'는 취지의 기술이 있는 만큼 근린제국 조항의 역할은 끝났다"고 말했음.
– 이는 교육기본법 제2조의 5가 '다른 나라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를 것'이라고 규정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 자민당은 또 여러 주장이 엇갈리는 사안의 경우 다수설과 소수설을 병기하고, 정부의 견해나 방침도 포함하게 할 방침. 이는 일본군에 의한 학살자 수를 두고 논란이 있는 '난징(南京)대학살'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측됨.
– 자민당은 오는 6월 '근린제국 조항 수정'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등 영토 교육 강화' 방침을 담은 대정부 제안서를 만들고, 논의 내용 중 일부를 참의원 선거 공약에 포함할 계획임.
– 일본은 1982년 역사교과서 파동을 계기로 '근린 제국과 국제 이해, 국제협조에 배려한다'는 조항을 교과서 검정 기준에 추가했음.
– 실제로는 1991년 중학교 공민(사회) 교과서 검정 시 '과거에 피해를 준 역사가 있다는 걸 잊어선 안된다'는 부분을 '과거에 견디기 힘든 고통을 안긴 역사가 있다는 걸 잊어선 안된다'는 표현으로 고칠 때 한 차례 적용했을 뿐이지만, 외교적인 상징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음.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10일 국회 답변에서 "(현행 검정기준에는) 애국심, 향토애라는 개정 교육기본법의 정신이 살아 있지 않다"고 말했고, 하기우다 의원에게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음.

○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도 취소"〉(4/26, 연합뉴스)
– 내달 3일 인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취소됐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6일 보도했음.
– 의장국인 중국이 "한중일 3국이 조정해야할 의제가 없다"고 회의 취소를 일본 측에 통보했음.
– 아사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둘러싼 중일 대립과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때문에 회담이 보류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음.
–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는 '아세안+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맞춰 거의 매년 개최돼 왔음. 한국 정부도 이날 중국으로부터 회의를 취소한다는 연락을 받았음.
–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중일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아세안+3' 회의에 앞서 한중일끼리 사전 의견 조율을 위해 만나는 자리인데 의장국인 중국이 '크게 사전 조율을 할 내용이 없다'며 취소를 통보했다"

고 밝혔음.

- 이 관계자는 "취소 배경을 해석하기는 조심스럽다"며 "현오석 부총리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으로 일정이 유동적인 상황이었다"고 덧붙였음. 한국은행은 회의 취소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피했음.

〈외통위, '日야스쿠니 참배·망언' 규탄결의안 채택〉(4/26, 연합뉴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안홍준)는 26일 '일본각료 등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을 채택, 본회의로 넘겼음.
- 결의안은 일본 각료·정치인들의 잇따른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와 침략전쟁을 부인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발언에 대해 "이러한 비이성적 망동과 망언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과 동북아 평화정착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외교적 도발 행위라는 점에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음.
- 결의안은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일본 자신의 미래와 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태평양전쟁의 전범을 참배하는 비이성적 망동과 부정할 수 없는 과거를 부정하려는 어리석은 망언을 중지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처절한 고통을 초래한 일본의 과거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죄를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적
- 결의안은 우리 정부에 "일본 부총리 등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일본 총리의 침략전쟁 부인 망언 등 군국주의 회귀 움직임에 대해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한 의지로 엄중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음.
-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일본 부총리 등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일본 총리의 망언에 대해 아시아 각국과 그 국민, 국제사회가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엄중히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음.

〈일본, 논란속 '주권회복 기념식' 개최〉(4/28,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61주년인 28일 도쿄 시내 헌정기념관에서 '주권회복·국제사회복귀 기념식'을 처음으로 개최했음.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오키나와(沖繩)현이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 주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 "(일본이) 지금까지 걸어온 족적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향해 희망과 결의를 새롭게 하고 싶다"고 말했음.
- 기념식에는 일왕부부, 중·참의원 의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음. 사민, 공산당 등 일부 야당은 찬반이 엇갈리고 논란이 일고 있는 행사에 일왕부부를 참석시키는 것은 일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참석을 거부했음.
- 특히, 주권회복 기념식에 대해 오키나와 주민들은 4월28일은 아베 정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권을 회복한 날이 아니라 오키나와로서는 일본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굴욕의 날'이라고 반발해왔음.
- 이와 관련, 오키나와 주민들은 이날 정부의 기념식 개최에 항의하는 집회를 별도로 오키나와 기노완 (宜野灣)시에서 갖고 "이번 기념식은 오키나와 현민들의 마음을 짓밟는 행위로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이날 집회에는 1만여 명(주최측 발표)의 주민들이 참석했음.

- 집권 자민당은 4월 28일에 주권회복 기념식을 정부 주최로 개최하는 것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었으며, 이에 대해 개헌을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 한편, 일본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로 6년8개월간 지속된 연합군최고사령부(GHQ)의 점령통치에서 벗어났음.
- 다만 오키나와(沖繩),아마미(奄美)군도, 오가사와라(小笠原) 열도는 강화조약 발효를 계기로 일본 본토에서 분리돼 미국의 시정권하에 계속 놓여 있다가 오키나와의 경우 1972년 5월 일본에 다시 반환됐음.

라. 미 · 중 관계

○ **〈미국 · 중국, 한반도 정세 관리 외교 본격화〉(4/22, 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위기지수가 치솟은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기 위한 외교를 본격화하는 양상임.
- 워싱턴 외교가는 21일(현지시간)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음.
-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우 특별대표는 24일까지 체류하면서 미국측 6자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비롯한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게 됨.
- 특히, 그는 조만간 북한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됨. 중국은 우 특별대표나 그보다 고위직 인사의 평양 방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이런 중국의 행보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메신저 외교'에 나선다는 뜻. 중국은 '메신저 외교'를 통해 2008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열리지 못하는 6자회담을 다시 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 이런 중국과 미국의 움직임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협의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셈. 오바마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은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협조'를 강조해왔음.
- 특히, 최근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존 케리 국무장관은 지난 17일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 측과 솔직하고 진지한 토론을 했다"면서 "과거와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음. 심지어 중국의 지원이 없으면 북한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까지 했음.
- 아울러 그는 중국이 우려하는 이른바 '포위전략'에 대해서도 미국의 진의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음.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 정책이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책이지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설득했다는 후문임.
- 이에 따라 케리 장관은 한반도에서 위협이 사라지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축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는 게 외교 소식통들의 전언.

미국의 이런 제안은 '북한의 도발→보상·협상→재도발→재협상'을 거듭해온 북핵 20년의 패턴을 종식하자는 의지가 담겨 있음.

- 또 중국이 미국의 협조 요청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은 더욱 적극적으로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북한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을 시사. 이는 곧 한반도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의 논리가 과거보다 훨씬 강하게 작용할 것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국의 대응이 주목되는 대목임.

마. 미·일 관계

○ 〈센카쿠 분쟁 와중 日 자위대 美 본토서 섬 탈환훈련〉(4/24, 연합뉴스)

- 일본 방위성은 오는 6월 미 캘리포니아 주에서 실시되는 미군의 섬 탈환 훈련에 육해공 3자위대 대원 약 1천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23일 발표했음.
- 미국 본토에서 전개되는 섬 탈환 훈련에 육해공 3자위대가 동시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해상 자위대에서는 헬기 탑재 호위함 '휴가'도 참가함.
-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육해공 자위대가 이번 훈련에 참가하기로 함에 따라 중국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됨.
- 방위성은 "특정 국가를 상정한 시나리오는 아니다"면서 "(미국에서 훈련하게 된 것은) 단순히 훈련 환경이 좋기 때문"이라고 설명.
- 한편, 일본 육상자위대와 미 해병은 지난 2월에도 미국에서 유사한 훈련을 실시한 바 있음. 방위성에 따르면 이번 훈련 명칭은 '새벽의 전격전(Dawn Blitz)'임.

○ 〈"미 국무 副장관, 일본 측에 야스쿠니 거론"〉(4/25, 연합뉴스)

- 일본 부총리 등 각료와 국회의원들의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로 한국,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윌리엄 번스 미 국무부 부(副)장관이 일본 측에 야스쿠니 문제를 거론했다고 일본 매체들이 25일 보도했음.
-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 중인 번스 부장관은 전날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 부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각료들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생각을 묻고, 한국과 중국의 반응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 번스 부장관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질문을 제기한 것 자체가 야스쿠니 갈등으로 한국, 중국 등과의 대북공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데 대한 간접적 우려 표명으로 풀이됨.
- 야스쿠니 관련 일본 내부의 자성론은 계속 제기되어 왔음.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郎) 일본유신회 간사장(오사카부 지사)은 24일 국회의원 168명이 참배한 데 대해 "집단으로 갈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나라면 살짝 참배하겠다"고 밝혔음.

– 또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자민당 선대위원장은 이날 한 민방 프로그램에 출연, 각료들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굴하지 말라'고 두둔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당일 발언에 대해 "서로 너무 과열되는 것 같다"며 "서로 과도하게 반응하면 점점 돌이킬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한 뒤 "정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 그러나 한국, 중국은 물론 일본 내부에서까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동안 잠시 관망하는 듯 했던 야스쿠니 참배 지지세력의 '반격'도 본격화했음. '일본 각료들에게는 위협에 굴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전날 아베 총리의 발언이 계기가 된 양상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자민당 정조회장은 24일 강연에서 참배가 "외교문제가 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며 "그런 일 때문에 영령을 위로하는 마땅한 자세가 바뀌어선 안된다"고 말했음.

바. 미·러 관계

〈푸틴 "마그니츠키 사망 사건에 범죄요소 없었다"〉(4/28, 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미국 간 외교 갈등의 최대 원인이 된 러시아인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사망 사건에 아무런 범죄적 요소도 없다고 주장했음.
– 푸틴 대통령은 이날 현지 국영 TV 방송 '라시야(Russia)-1'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주장과는 달리 마그니츠키에 대한 고문은 없었고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다른 어떤 요소도 없었다"며 "수사는 종결됐다"고 강조했음.
– 그는 이틀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미국이 마그니츠키 사망 사건을 문제 삼아 대(對) 러시아 인권법인 '마그니츠키법'을 채택한 것은 제국주의적 대외정책의 표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음.
– 푸틴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도 "마그니츠키는 폭행을 당하지 않았으며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주장한 바 있음. 그는 미국 교도소에서도 죄수들이 사망한다며 미국은 마그니츠키 사건이 아니었더라도 러시아를 비판할 다른 구실을 찾았을 것이라고 마그니츠키 사망 사건을 문제삼은 미국을 비난했음.
– 영국계 투자펀드 허미티지캐피털의 모스크바 사무소에서 일한 러시아인 변호사 마그니츠키는 2008년부터 자국 검찰과 경찰, 판사, 세관원 등 고위공무원들이 연루된 대규모 비리사건을 파헤치다 탈세 방조 혐의로 기소돼 조사를 받던 중 2009년 11월 모스크바 구치소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음.
– 구치소 측은 마그니츠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허미티지캐피털 사장 윌리엄 브라우더와 대통령 산하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현지 인권단체 등은 마그니츠키가 구치소 내에서의 폭행으로 숨졌다고 주장했음.
– 사건 수사를 맡은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지난달 마그니츠키 사망에

범죄 요소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

- 미국은 지난해 12월 마그니츠키 사망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대러 인권법인 '마그니츠키법'을 채택. 뒤이어 이달 중순 이 법을 적용하는 차원에서 인권침해 혐의로 미국내 자산 동결과 비자 발급 금지 등의 제재를 받을 러시아인 18명의 명단을 발표했음.
- 한편, 마그니츠키법 채택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인의 러시아 아이 입양 금지 내용 등을 담은 대미 인권법을 제정했던 러시아도 곧바로 미국인 18명의 제재 명단을 발표하며 맞대응한 바 있음.

사. 중 · 일 관계

〈中 "센카쿠는 '핵심이익'"…타협 · 양보불가 대상 선언〉(4/26, 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이 진행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핵심 이익'으로 공식 규정했음.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느냐는 물음에 "댜오위다오 문제는 중국의 영토 주권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밝혔음.
-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센카쿠 열도를 '핵심 이익'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음. 핵심 이익이란 외국에 타협이나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국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영토 문제와 관련해 사용되던 단어임.
- 중국은 전통적으로 티베트(중국명 시짱)자치구, 신장위구르자치구, 대만 등을 핵심 이익으로 규정했음. 중국은 최근 들어 남중국해 도서를 핵심 이익에 포함하는 등 영유권 분쟁의 대상으로까지 핵심 이익 적용 범위를 넓혔음.
-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핵심 이익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중국이 센카쿠 분쟁에서 더욱 비타협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옴.
- 중국은 작년 9월 일본이 센카쿠 열도의 섬들을 국유화하기 전까지는 센카쿠를 명시적으로 핵심 이익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는 가운데 일본과의 공동 개발 등 타협점을 모색해왔음.

아. 일 · 러 관계

〈"일본-러시아, 외교 · 국방각료 2+2협의틀 구축"〉(4/26,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러시아 방문(28~30일)을 계기로 양국이 정상간 협의를 정례화하고, 외교 · 국방 각료회의(일명 2+2)를 개최하는데 합의할 것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26일 보도했음.
- 신문에 따르면 양국은 정치와 안보 분야에서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양국 간 영토 갈등 사안인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찾는 차원에서 이 같은 대화채널 구축을 추진 중임.
- 양국이 외교안보 분야 협의채널을 강화하려는데는 중국 견제 측면도 엿

보임. 중국과 갈등하고 있는 일본만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최근 중국과 밀월관계인 러시아도 일본과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동북아에서 힘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상황. 일본이 먼저 정상회담의 활성화와 '2+2' 채널 구축을 러시아 측에 제안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음.

- 일본은 미국, 호주 등 2개국과, 러시아는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4개국과 각각 2+2 회담 채널을 가동하고 있음.
- 양측은 29일 열릴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정치·안보와 경제통상, 투자, 에너지, 과학기술, 인적교류 등 다방면에 걸친 양국관계 발전 방안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음.
- 한편, 아베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도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9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등을 활용해 추가로 정상회담을 가질 전망임.

자. 기 타

〈러시아 극동장관 "남·북·러 가스관 사업 포기 안돼"〉(4/23, 연합뉴스)

- 한반도 위기에도 러시아가 극동에서 북한을 경유해 한국으로 가스관을 연결하는 사업을 포기해선 안된다고 빅토르 이샤예프 극동개발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주장했음.
-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를 겸하고 있는 이샤예프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남북한의 이전 지도부 간에 가스관 건설에 관한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현재의 불안한 한반도 상황 때문에 이 계획이 뒷선으로 밀려났다며 이같이 주장했음.
- 극동연방지구 전권대표실에 따르면 이샤예프는 "긴장 상태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협상 테이블에 앉아 각자의 생각들을 얘기해야 한다"며 "처음으로 돌아가 이웃국가(남북한) 간의 관계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음.
- 그는 "우리는 이전에 북한 지도부와 남북러 가스관 건설 사업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 사업은 남북한 모두에 이로운 것"이라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가스관 프로젝트에 동의했고, 통과료를 받는 조건으로 가스관이 북한을 지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소개했음. 그는 "내가 이 협상에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덧붙였음.

〈동북아서 외면당한 아베 외교, '외곽때리기'〉(4/25, 연합뉴스)

- 야스쿠니(靖國) 신사 각료참배 등 역사문제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갈등으로 동북아 이웃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외곽 때리기' 외교에 나섬.
- 아베 총리는 오는 28일 러시아 방문에 이어 내달초 터키를 방문, 각각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임.
- 또 아베 총리는 당초 5월말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보였던 한중일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그 시기에 미얀마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이 25일 보도했음.

- 최근 중국과 밀월관계인 러시아와는 대규모 투자기금 조성 등 경협을 주의제로 삼아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반환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할 복안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터키 방문 때는 수주 경쟁에서 한국을 따돌린 원전 건설 사업에 합의할 예정. 또 일본-터키 간 외교장관 회담 정례화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 터키를 발판삼아 중동,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을 상대로 자원 및 경제외교의 외연을 확대하려는 포석으로 보임.
- 중국의 앞마당으로 여겨져 온 미얀마도 풍부한 지하자원을 갖춘데다 최근 테인 세인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 속에 경제발전에 속도를 내고 있어 잠재시장으로서의 가치가 큰 만큼 각종 지원을 고리로 관계 강화를 모색할 전망임.
- 일본 정부는 최근 해외투자 · 원조 유치 등에서 테인 세인 정권과 일정 부분 협력하고 있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아웅산 수치 여사를 일본으로 초청, 7일간(13~19일) 융숭한 대접을 하는 등 사전 정지작업을 한 바 있음.
- 이런 가운데, 일본은 최근 중국과의 갈등 상황 등을 감안해 다음 달로 예정했던 오타 아키히로(太田昭宏) 국토교통상의 중국 방문은 미루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전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